

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3년 6월 27일
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년 6월 1일

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3년 6월 1일

라. 상정일자: 제29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

행정·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·의결(2023. 6. 27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홍보정책과장 마준오)

☐ 제안이유

「뉴미디어¹⁾ 시대」의 도래에 따라 구민 대상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고 콘텐츠를 활용한 취·창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강서구민의 뉴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과 창작활동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

1) 뉴미디어

- 라디오, TV 등 기존의 미디어를 제외하고 전자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통신수단으로서 대중매체를 지배하는 미디어 또는 기존의 매체가 다른 매체 등과 결합하여 보다 편리하고 진보된 새로운 기능과 실용성을 갖춘 미디어를 뜻함

□ 주요내용

가. 조례명칭 변경
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」

→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나. 뉴미디어지원센터의 기능 규정 (안 제4조)

다.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 정비 (안 제8조)

라. 구민 영상크리에이터 운영 근거 마련 (안 제11조)

마. 기타 별표 및 별지 서식 개정 (별표 1 ~ 별표 3, 별지 1 ~ 별지 6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 제3조의2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 ※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완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3. 4. 14. ~ 2023. 5. 4.) 결과: 의견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안 제7조제2항제3호 삭제 권고

- 조치결과: 해당조문 삭제

3) 규제사전심사 결과: 해당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장석현)

가. 개정 취지

- 본 개정안은 「뉴미디어 시대」에 발맞춰 영상 콘텐츠 제작 및 활용 능력 향상 등 강서구민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설치된 「뉴미디어 지원센터」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주요 내용

- 안 제1조는 강서구민의 뉴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과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지원센터²⁾」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함
- 안 제4조는 「뉴미디어지원센터」의 기능으로 주요 시책사업 및 구정소식 홍보, 디지털 약자와 취약계층의 미디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역 영상크리에이터들의 뉴미디어 관련 취·창업 지원 등의 역할을 명시함
- 안 제6조는 강서구청장은 「뉴미디어지원센터」의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사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

2) 뉴미디어지원센터 현황(前 영상미디어센터)

- 개 관: 2004년 5월 14일
- 위 치: 강서구민회관 2층(우장산로 66)
- 주요시설: 강의실, 디지털편집교육실, 스튜디오 등(면적 509m²/154평)
-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(양천로10길 38, 방화동) 설립 예정
: 강의실, 인큐베이팅실 등(면적 506.91m²/153평)

- 안 제7조 ~ 제10조는 「뉴미디어지원센터」의 시설·장비 사용 신청, 사용료 기준 및 반환 규정,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이용자의 사용제한 조치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치에 따라 기타 구청장이 긴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사용신청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음(제7조제2항)
- 안 제11조는 강서구청장은 구정홍보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영상크리에이터 및 홍보 모니터요원 등(이하 “구정크리에이터등”)을 선발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음

다. 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은 강서구민의 영상 창작 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설치된 ‘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지원센터’의 기능을 명시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,
- 구민을 위한 미디어 교육 및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등 첨단 기술과 새로운 매체가 주도하는 「뉴미디어 시대」에 발맞춘 개정안으로 판단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 법령 1부.

□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

제3조의2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,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,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·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